

도서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도서관에 중심축 둔 도서전달체계 구축을

李重漢

서울신문 논설위원 · 출판평론가

나는 최근 「전달되지 않는 책」이란 글을 쓴 일이 있다. 이 글의 요지는 두 가지였다. 첫째 상당히 많은 양의 책들이 서점공간에서 전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형서점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신간만 월별로 2천종 이상씩 나오는데 이를 전시할 공간을 가진 서점은 없다. 그렇다면 이 신간들의 간행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찌다 신문지면에 1단기사라도 나는 것을 위해서 나오는가.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한 방송프로에서 이 전시되지 않는 책들을 소개한 뒤 당신이 말한 그 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의 상황이다. 이런 책일수록 보다 잘 전달되어야 할 쓸 만한 책임을 적어도 출판인들 자신은 알고 있다.

둘째는 곧잘 전시가 된 책들도 또 1년쯤만 지나면 적어도 우리의 공공적 구조 속에서는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이유도 실은 굳이 설명할 것이 없는데, 도서관이 주장하지 않고 서점이 보관하지 않으며 출간 당사자인 출판사마저 이미 한번 승부를 낸 이상 계속해서 그 책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기이한 책의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낸다. 책은 전승의 문화이고 반복적으로 재검토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업적을 이루게 하는 기초적 자료의 문화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책들은 전승을 위해 전달되지 않고 실제의 독자를 향해 다가갈 수조차 없는 구조에 있다. 그렇다면 마치 가판대에서 버려지는 시간까지의 일간지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 형식의 미디어가 출판미디어인가를 우리는 좀더 따져보아야 할 계층에 있다.

출판했지만 전달되지 않는 책

이렇게 된 원인을 이해한다는 일은 대단히 쉽다. 우선 도서관이 그 나라에서 간행된 모든 인쇄자료를 보관하는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납본제도는 오히려 중첩적으로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과 문화부 출판과에 각각 2부씩 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상금제도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납본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6천씩 내야 하는 일이 부담이 되는 한정판도 있을 수 있고, 또 국회도서관 같은 경우엔 납본 그 자체를 선별로 받고 있다. 보상금 예산

이 한정돼 있고 그 한도내에서 납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대의 관습으로 납본이 곧 검열대상이 된다는 인식도 있다. 이 와중에서 결국 간행된 모든 책은 일단 소부수나마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 와해돼버렸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일반공중에 책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일을 제대로 시행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경우까지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하도 오래도록 책 빌려주기를 무심히 해온 탓으로 이에 이제는 일반공중 스스로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인지도조차 왜곡하고 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아이들이 대입시험공부나 하는 곳쯤으로 믿고 있다.

도서관의 역할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공중만이 아니다. 출판사 자신도 마찬가지다. 도서관에 책을 판다는 일은 지금 대학도서관까지를 포함해서 1백부정도 파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도서관을 믿고 책팔기를 시작할 수 없다.

그 결과 출판사들의 유일한 유통체계는 서점에 대한 직판체제로 성립돼 왔다. 이 구조는 언뜻 당연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구조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출판사수나 출판량이 서점의 공간비율과 맞먹할 때에만 그렇다는 점을 오래도록 유심히 생각해오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산업화과정과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소규모 구멍가게 수준으로 서점이 작아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추세이고, 서점의 평균공간이 작아졌으므로 이 공간을 통해서 모든 책이 전달될 수 없게 되는 것도 또한 너무나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러나 출판자의 관점은 여전히 기존체제로서의 서점판매망에만 매달려 있다. 그리고 이 체계를 어떻게 더 잘 연계시킬 수 있을지에만 머물러 있다. 그래서 주된 관심의 표현은 지금도 도서 일원화공급기구이다. 하지만 도서 일원화공급기능이 완성됐다고 해서 마지막 판매단위인 서점의 전달규모가 커지거나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다지 심각한 과제로 부상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일원화공급기구에 가입한 출판사들의 책만을 더 잘 전시되도록 하는 방법만 강구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 도서의 충분한 전달력으로서 보면 개별집단적

도서전달체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모든 책이 아니라 좋은 책,

보다 분명히 독자에게 전달되고

역사적으로 전승될 책들을 대상으로

조직돼야 할 필요와 당위가 있다.

좋은 책들을 어떻게

잘 전달되게 하느냐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며,

도서관 중심의 전달구조 확립은

그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이익추구의 방법 밖에는 더 다른 효율은 없는 것이다. 이럴 때 도서일원화공급기구에 가입하지 않는 책들의 불이익은 개별적인 것인가. 모든 책의 입장에서 오히려 독자에 대한 전달의 제한밖에는 의미가 없다.

서점판매망에만 내맡길 경우의 문제들

서점단위로 보면 문제는 또 달라진다. 우선 자신의 공간규모에서 자신의 가게를 운영해갈 수 있는 책들만이 우선적 전달대상일 수밖에 없다. 즉 베스트셀러 순위로 또는 잡지순으로 매장을 꾸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공급되는 책을 모두 전시해서 소부수·소독자의 책들까지 전달의 책임을 저 달라는 주문을 한다는 것은 기실 무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도서전달체계는 그동안 현상만을 일시적으로 대응하며 전체구조를 보아 오지 못한 탓으로 이제 가장 협소하며 막힌 골목과 같은 조건에 부딪히게 되었음을 깨달을 때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서점위주의 전달구조에서 서점의 변화를 논의한 적이 있다. 그 하나는 서점의 전문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 책의 내용 영역별로 나누어 책을 전시하면 그래도 그 영역별로는 책의 전시공간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러나 이 주문의 모순은 영역별로 해서 서점운영이 가능한 영역이 몇개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결국 누구나 전문서점에 매달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또하나의 주문은 적은 수나마 대형서점이 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또 기존 소형서점들의 생존권문제로 전이되었

다. 생존권에 대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이상, 개인적 영업행위인 서점의 구조 개편을 사회가 할 수는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이 서점위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한 나는 우리의 도서전달 체계가 보다 퇴영적이며 낮은 차원의 문화확대에만 기여하는 체계가 되는 것임을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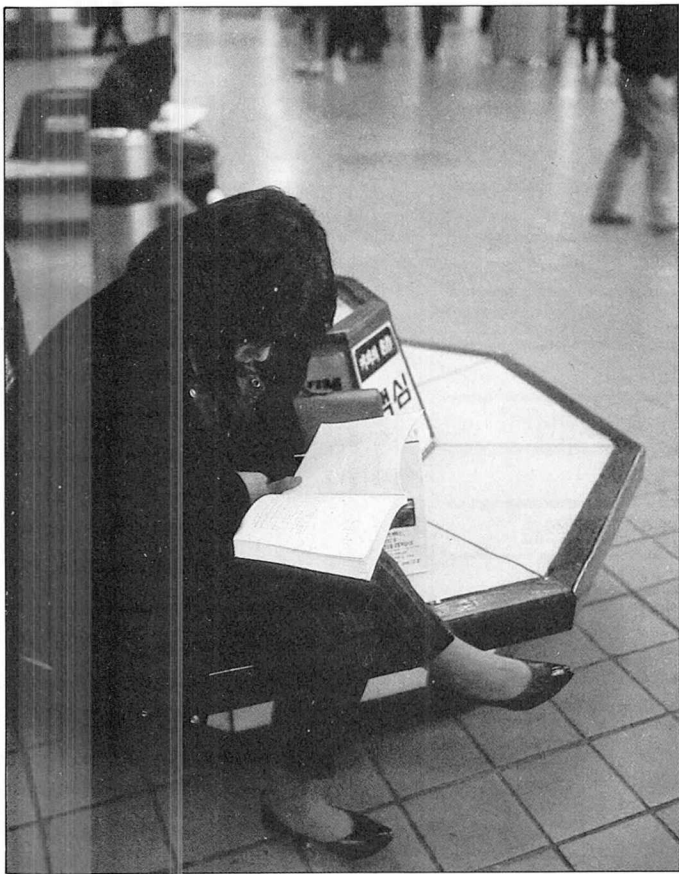
우수도서가 현실적 전달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대단히 늦은 일이긴 하지만 도서 전달체계의 중심을 공공도서관에 두어야 할 것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일이다. 물론 현대계에서의 공공도서관에 그 축을 둘 수는 없다. 무엇보다 도서관구입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하다면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증대를 노력하는 것이 또 일의 순서이다. 도서구입비를 증대하여 공공도서관의 도서구입규모를 권당 1천부 수준까지만 높인다면 오늘날 5백부밖에 발행하지 못하는 질적 우수도서들의 입지는 명백하게 현실적 전달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좋은 책의 생존이 분명해진다.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대의 과제는 공공도서관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통칭 4천개로 집계되는 학교도서관의 구입비 증대노력도 도서전달의 활성화 체계에 편입을 해야 한다. 청소년 도서에의 관심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막상 공들인 책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시중의 점두에서 수천부를 팔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시장거점 자체를 학교도서관으로 분명하게 설정하는 방법만이 현실적인 것이다.

둘째로는 독자와 직접 만나는 채널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이다. 북클럽제도가 있고 우편 판매방법도 있고, 직접매달제도 채택한 뒤 수급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크레디트카드제의 병용방식도 개척할 수 있다. 이 제도들이 여타 일반상품에서는 시행되고 있음에도 출판에 있어 담보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제도일수록 이를 통합하는 관리기능이 필요함에도 이 관리능력이 출판계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뿐이다.

출판은 개인적 작업의 성격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의 성립이 어려운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창출이 실은 도서 일원화공급기구의 창출보다는 훨씬 쉽다는 점이 크게 간과돼



있는 것 같다. 서점의 구조를 보다 기능적으로 개편토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는 하다. 예컨대 도서일원화공급기구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지정서점들의 위치별 장점을 추출하여 전문성을 가미한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이 거점들을 상호연계하여 갖고 있지 않은 목록들도 찾아다 주는 체인화를 시도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돈을 내고 사보려는 책'에 제한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문화 속에서 관심을 갖는 도서전달의 내용은 보다 좋고 보다 오래 전송되어야 할 질적 도서들이다. 이 책들이 잘 조직된 체인화만으로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런 책일수록 직접 독자가 그 책 실물을 만져보고 들추어봄으로써 구입을 결정하는 책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점거점의 활성화는 도서안내의 기능을 현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바엔 다시 앞서 적시한 북클럽 제도가 더 효율적인 것이다.

‘모든 책 아닌’ 좋은 책이 문제의 핵심

문제는 딴 곳에서도 제기된다. 이번 문화발전 10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전자서점 아이디어

같은 것이 또다른 상황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미디어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도 도서전달에 있어서는 새로운 유념의 과제이다.

전자서점은 서점에서 독자의 요구에 의해 책을 개별적으로 간행하자는 발상에 근거한다. 내용을 미리 독자가 점검하고, 구입결정을 한 뒤 제책을 하자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발상은 현실적인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을 고르는 독자의 성향과 수준과 지적 범위는 어떤 것인가. 이 점에서 고려할 때 이 전자서점들에서 이루어지는 책의 간행은 따지지 않아도 현수준의 문화능력만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책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 굳이 전달해가고자 하는 책들의 의미는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여전히 고전적인 가치를 갖는 책들이다. 이 고전적인 형식과 가치의 책들만이 실은 새 미디어환경에서 계속 존속해갈 수 있는 책들이기도 하다. 이 책들은 앞으로 누가 간행하고 누가 전달하고 누가 볼 것인가가 도서전달체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도서관 중심의 전달구조가 확립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도서관학의 거장 피어스 버틀러(Pierce Butler)의 표현을 빌자면 도서관 사회적 기억이며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심리(realmentality)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도서관은 그 사회의 심미적 평가의 기준도 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도서관은 우리사회를 너무 잘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서 사회적 기억을 삼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한 양태에 놓여 있다.

모든 책은 사회적 역사로서 보관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현상과 같이 오히려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나올지 모른다는 측면도 갖고 있다. 이것은 꼼꼼히 생각할 때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비극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도서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은 모든 책의 도서전달체계가 이전에 보다 좋은 책, 보다 분명히 독자에게 전달되고 또 역사에 전송되어야 할 책들을 대상으로 조직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당위가 있다.

좋은 책들을 어떻게 잘 전달되게 하느냐는 또 바로 좋은 책들을 어떻게 더 잘 읽히게 하느냐와 연결되고 이 연결이 성취되면 자연스럽게 독자의 개발도 확대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작업을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저 내가 낸 책을 어떤 방법으로도 팔 수 있는 방법이란 그 책 나름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

다행히 공공도서관의 일부나마 우선 행정부의 관할을 바꾸는 작업이 성사가 되고 있다. 이 계기는 대단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돼야 한다. 우선 당장 공공도서관이 어떤 활성화 능력을 갖게 되느냐를 현실적으로만 계산해서 좀 두고 보자는 생각에 머물고 여전히 출판사들은 현존 서점규모 속에서 내책 수급하기만을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도서전달 정상화는 90년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낙후된 채로 머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요약해 보려 한다.

- ①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공중적으로 보다 좋은 책을 시의적절하게 취향별, 요구별로

전달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고 이 작업에 출판의 본질적 발전방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 ② 출판사는 서점판매구조나 현존하는 독자 구입능력만을 기준으로 책의 판매에 관심을 갖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출판의 질과 문화의 질에 좀더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국민적으로 전달되어야 할 책이 일시적으로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구조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③ 국민적 독서운동이 사회적 현안이라면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독서 유발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예컨대 도서발송의 우편요금도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고 도서유통을 돕는 사회 각부분별 노력이 더 집합되어야 한다. 지하철 판매구조나 각급마켓구조에 있어서도 도서전달에 대한 유의가 더 커지도록 해야 한다.

- ④ 납본제도가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재개판되어야 한다. 정보화시대에 있어 간행된 책의 모본마저 사회적으로 보관되지 않는 상황은 결과적으로 타사회의 보관자료만을 모본으로 보는 불균형을 만들 수도 있다.

- ⑤ 서점은 좀더 기능적으로 효율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존 도서유통 능력상황에서 개별운영이 불가능한 전문서점은 공익적으로 부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조직하여 그 거점을 성립시키도록 도와야 한다.

- ⑥ 도서안내기능이 현대화돼야 하고 이 기능을 위한 출판계 협업의 조직이 창출될 필요도 있다. 전시불능, 공시능력 취약의 도서들까지 오직 그 내용의 질적 가치만을 중시하여 전달을 확대해주는 공익적 기능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출판과 독자의 읽기수준은 여전히 독자가 직접 사게 되는 하향이동적 대중취향 도서의 확대만으로 더 굳어져 갈 것이다. 특히 읽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의 현구좌와 그 전방에 따른다면 더욱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